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대응

공민석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미국과 중국의 상호의존적 관계는 상호이익의 공생관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한 관계이기도 했다. 2007-08년 금융위기는 미국 패권의 취약성과 미중 상호의존성의 한계가 드러나는 계기였고, 미국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패권을 쇄신하기 위해 세계전략을 전환했다. 중국 또한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압력이 강화되자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비하고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시대를 거치면서 미중 패권경쟁은 무역·기술 전쟁에서 통화·금융 전쟁으로, 나아가 가치와 체제의 정당성을 둘러싼 전면전으로 확대됐다.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시작했고, ‘기술굴기’ 핵심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또 중국 기업을 미국의 금융시스템에서 배제하려는 제재 조치를 가동했다. 중국은 첨단산업 역량과 기술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내수 중심 발전으로 전환해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더 강조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가치에 기반한 동맹관계 회복이었다. 또 강력한 산업정책을 통해 첨단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겠다는 구상 또한 중요하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가치동맹이 기술·생산동맹으로 진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가치동맹이 기술·생산동맹으로 확대되면서 신냉전적 대립구도는 더 강화됐다. 중국 또한 일대일로 전략의 초점을 전통적 인프라 건설에서 디지털 인프라 건설로 전환해 기술굴기와 결합하는 등 미중 상호의존성의 틀에서 이탈하려는 시도를 가속화했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패권경쟁의 전개는 미중 상호의존성의 종언, 즉 탈동조화(decoupling)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두 강대국의 갈등을 최대한 순치시키고, 신냉전적 줄서기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전략을 기본적인 생존의 차원에서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목 차

- I. 미중 상호의존성의 형성과 진화
- II. 상호의존성에 내재된 적대와 모순
- III. 미중 패권경쟁의 격화와 주요 쟁점
- IV.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미중 관계
- V. 세계 질서의 진로와 한국의 대응

미중 전략경쟁이 통상적인 강대국들 간의 갈등과 구별되는 점은 긴밀한 상호의존성에서 배태됐다는 점임.

특히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에는 세계화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고, 미중 양국은 물론, 인접국들까지 복잡한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서 맞물리게 됨.

I. 미중 상호의존성의 형성과 진화

- ◆ 미중 전략경쟁이 통상적인 강대국들 간의 갈등과 구별되는 점은 긴밀한 상호의존성에서 배태됐다는 점임. 냉전기 미소관계는 이데올로기적인 극한 대립에 뿌리를 두고 있었고, 두 진영의 체제경쟁 속에서 상호작용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음. 반면 미중갈등은 소위 ‘키신저 질서’ 하에서 지난 40여년 간 누적된 복잡한 상호작용에 기반을 두고 있음. 특히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에는 세계화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고, 미중 양국은 물론, 인접국들까지 복잡한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서 맞물리게 됨.
- ◆ 미중 상호의존성의 형성과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계기는 미국 패권의 변화였음. 1970년대에 패권 위기에 직면한 미국은 기축통화 발권력과 금융부문의 우위가 서로를 강화하는 통화·금융 권력을 토대로 패권 쇄신에 성공했음. 이 때문에 산업생산에서의 우위는 이미 쇠퇴했고 이중적자도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상황에서 이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대규모 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었음. 미국은 이를 토대로 경기를 부양하고, 생산 이상의 소비를 지속할 수 있었음. 통화·금융 권력에 기반한 막대한 자본수입(capital import)은 첨단기술과 군사력에서의 우위 확보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 미국의 통화·금융 권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금융세계화의 확대, 그리고 흑자국과의 정책 조정이 필수적이었음. 흑자국들이 미국 금융시장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달러 자산을 보유해야 잉여달러가 환류(recycle)될 수 있었기 때문임. 1980-90년대에 이러한 메커니즘의 핵심은 일본과 독일(서독)의 역할이었음.
- ◆ 2000년대에는 중국이 이들을 대체했음. 1997-98년 외환위기 이후 지역 분업구조의 가장 낮은 단계로 편입된 중국은 미국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소비시장에 의존해서 급속한 경제성장에 성공했음. WTO에 가입한 이후에는 미국의 금융 호황에 편승해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거듭났음. 미국 중심의 국제 정치경제 질서로 완전히 편입된 중국은 미국 주도 세계화 구조를 지탱하는 핵심 파트너이자 경쟁자로 부상했음.
- ◆ 특히 중국은 대미 수출을 통해 축적한 수출달러를 다시 미국의 금융시장, 특히 미국 국채에 투자함으로써 미국이 막대한 적자의 누적에도 불구하고 통화·금융 권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음. 그러나 이 과정

에서 중국 또한 안전 자산을 축적하고, 대미 수출을 통해 성장을 지속하는 선순환 관계가 형성됐음. ‘차이메리카(Chimerica)’(Ferguson and Schularick, 2009), 혹은 ‘신 브레튼우즈 체제(revived Bretton Woods / Bretton Woods II)’(Dooley et als, 2003) 라는 용어가 금융의 중심 미국과 생산의 중심 중국 사이의 상호의존적 공생관계를 함축적으로 보여줌.

- ◆ 미국과 중국의 상호의존성은 1980년대 미일관계의 기본 메커니즘과 유사했지만 중요한 차이점도 가지고 있었음. 우선, 미국의 부채 규모와 자본수입액이 훨씬 더 커졌음. 따라서 미중 사이의 경제적 불균형도 1980년대 미일 불균형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었고, 양국 사이에 잠재된 갈등 또한 더 위험했음.
 - ◆ 금융불안정성 또한 중요한 문제였음. ‘닷컴버블’ 붕괴와 함께 신경제 호황이 종언을 고한 2001년 이후 미국 금융시장 팽창은 부동산 파생상품을 중심으로 전개됐기 때문에 더 큰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었음.
 - ◆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일본과 중국이라는 두 파트너가 미국과 맺고 있는 관계의 성격 자체임. 일본은 군사·안보적으로 미국에 종속돼 자율성을 결여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순응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음. 중국 또한 미국 주도 국제 정치경제 질서에 순응하는 전략을 통해서 발전을 도모했지만,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며, 독자적인 지정학적 야심을 가지고 강력한 외교·안보적 독립성을 추구했음. 또 급속한 군비지출 증가를 통해서 군사력 또한 빠른 속도로 강화했음. 이는 양국의 상호의존성에서 적대나 균열이 발생할 경우 갈등이 증폭되고, 국제질서의 불안정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음.
- ※ 미국은 엔화 국제화나 동아시아 지역 경제권 형성을 통해서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일본의 시도에 비판적이었음. 결국 일본의 시도는 실패하고, 1990년대 초반 장기침체 국면에 진입한 이후 국력의 쇠퇴를 경험했음. 반면, 독일의 경우 유럽통합을 통해 독자적인 경제적 영향권을 구축했고, 1970-80년대와 다른 방식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었음.

II. 상호의존성에 내재된 적대와 모순

미국과 중국의 상호의존적 관계는 상호이익의 공생관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한 관계이기도 했음.

◆ 미국과 중국의 상호의존적 관계는 상호이익의 공생관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한 관계이기도 했음. 과도한 외환보유는 불태화 비용, 국내 수요침체, 고수익 투자기회의 상실 등 각종 비용을 유발했음. 또 한 국가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기축통화 발행국의 통화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비대칭적인 권력관계를 내포하고 있었음. 이 때문에 중국은 달러 가치 유지에 이익을 갖게 됐고, 지속적으로 수출달러를 환류시킬 수밖에 없었음.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미국은 달러의 안정성에 관한 어떠한 공약도 하지 않는 ‘과도한 특권(exorbitant privilege)’을 누릴 수 있었음.

※ 드골 대통령 재임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데스탱(V. G. D’Estaing)은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큰 부담 없이 국제수지 적자를 누적할 수 있는 상황을 “과도한 특권”이라고 비판했음. 중국 인민은행 총재 저우샤오촨(周小川)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미국이 갖는 이러한 특권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음.

◆ 자본수입에 기초한 금융세계화의 확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였음. 적자 누적으로 인해 달러가 유출되면, 이를 환류시키기 위해 미국 금융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했음. 그러나 미중 글로벌불균형의 규모, 그리고 금융버블로 인한 불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달러에 대한 신뢰와 금융시장의 안정적 팽창이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

2007-08년 금융위기는 미국 패권의 취약성과 미중 상호의존성의 한계가 드러나는 계기였음.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패권을 쇄신할 수 있는 대안을 확립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했음.

◆ 2007-08년 금융위기는 미국 패권의 취약성과 미중 상호의존성의 한계가 드러나는 계기였음. 위기가 발생하자 미국은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위기를 수습하고, 통화·금융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했음.

◆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패권을 쇄신할 수 있는 대안을 확립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했음. 세계전략의 중심축을 동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한 오바마 행정부의 재균형 전략(Rebalance toward the Asia-Pacific)은 바로 이런 전략적 고려의 산물이었음.

◆ 재균형 전략은 대외전략의 전 영역에서 광범위하고 실제적인 변화를 수반했음. 우선, 군사전략에서는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을 고려한 새로운 작전개념이 확립돼 육군 중심의 공지전(AirLand Battle)이 해·공군 중

심의 공해전(Air-Sea Battle)으로 대체됨. 국방예산 감축계획에도 불구하고 서태평양에서 해·공군 전력의 대대적으로 증강됐고, 그 결과 태평양과 대서양의 전력 비중이 5:5에서 6:4로 조정됐음.

- ◆ 대외경제전략의 핵심은 범태평양파트너십(TPP)이었음. 'WTO+' 기준을 지향한 TPP는 통상적 무역협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었음. 환율조작에 관한 제재, 외국인 투자 차별 철폐, 지적 재산권 규제 강화 등은 지역경제 질서를 주도적으로 재편하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음.
- ◆ 트럼프 행정부 또한 재균형 전략의 기초를 계승했음. 다자주의에 입각한 관여(engagement) 정책을 지향한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일방주의적 접근법을 선호했음. 그러나 재균형 전략을 통해 미국이 달성하고자 했던 실제적인 목표들은 변화하지 않았음.
- ◆ 군사전략에서는 서태평양 지역의 군사력 증강 기초가 강화됐음. 특히 중국을 압박할 수 실효성있는 군사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더 강조되기 시작했음. 재균형 전략을 대체한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이 그 결정판이었음. 이에 따라 미국, 호주, 일본, 인도의 쿼드(Quad) 동맹이 부활했고,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재개, 남중국해에서의 군사태세 강화 등 대중 강경조치가 시행됐음(the White House, 2017; U.S. Department of Defense, 2019).
- ◆ TPP 탈퇴라는 중요한 변화도 나타났음. 그러나 TPP 탈퇴 이후에도 대외경제전략의 핵심은 흑자국, 특히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압박이었음. 주요 쟁점 또한 환율조작 제재, 기술이전 강요 금지, 지적재산권 규제 강화, 불법 보조금 철폐 등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 변화한 것이 있다면 TPP라는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 틀이 양자주의로 전환되면서 미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졌다는 점이었음. 이는 결국 무역전쟁으로 귀결됐음.
- ◆ 일방주의 기초의 강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중 정책의 기본 전제가 변화했다는 점이었음. 재균형 전략은 미중 갈등의 증폭,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강화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었음. 그러나 동시에 미국 중심 국제질서의 복원력에 대한 신뢰, 중국과의 공존 가능성을 전제로 한 전략이기도 했음. 그러나 트럼프 시대를 경유하면서 후자의 경향이 급속히 탈락됐고,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양국의 갈등은 더 악화됐음.

*중요한 것은 대중 정책의
기본 전제가 변화했다는
점이었음.*

*트럼프 시대를 경유하면서
양국의 갈등은 더 악화됐음.*

중국도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압력이 강화되자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비하고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모색하기 시작했음.

◆ 이는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패권전략으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변화였지만 트럼프의 이단성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변화이기도 했음.

◆ 중국도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압력이 강화되자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비하고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모색하기 시작했음. 미국과의 정책 공조 속에서 미국의 요구에 순응했던 1980년대 일본과 달리, 중국은 중국제조2025 같은 발전전략을 통해 첨단기술에서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대일로 같은 기획을 통해 영향권을 구축·확대하려는 강력한 시도를 전개했음. 미국이 이에 강하게 대응하면서 패권경쟁은 격화됐고, 미중관계는 신냉전으로 지칭될 정도로 악화되기에 이르렀음.

III. 미중 패권경쟁의 격화와 주요 쟁점

무역전쟁은 표면적으로는 무역 불균형의 문제였지만, 핵심은 첨단기술과 생산에서 우위를 장악하기 위한 경쟁이었음.

◆ 미중갈등의 뇌관은 무역전쟁이었음. 무역전쟁은 표면적으로는 무역 불균형의 문제였지만, 핵심은 첨단기술과 생산에서 우위를 장악하기 위한 경쟁이었음. 2019년 ‘국방수권법’은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CFIUS)를 통해서 미국에 투자된 중국 자본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을 심사하고, 핵심기술의 유출을 통제하도록 규정했음. 중국제조2025에 대한 강력한 비판, 이와 관련된 기업에 대한 직접적 제재에서도 무역전쟁이 단지 무역 불균형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음.

※ 이러한 갈등 또한 오바마 행정부 시기부터 이미 나타난 바 있음.

2012년 ‘국방수권법’에도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가 야기하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음. 이는 칭화유니의 마이크론 인수, 브로드컴의 쉘컴 인수 시도를 좌절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미국은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시작했고, ‘기술굴기’ 핵심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음.

◆ 무역·기술 전쟁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 재편을 둘러싼 긴장 또한 고조되기 시작했음.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행정명령과 법안을 통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시작했고, 화웨이, 중싱(ZTE), 푸젠진화반도체, SMIC 등 ‘기술굴기’ 핵심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음.

※ 이에 따라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5%까지 높인다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했음. 푸젠진화는 D램 생산을 중단했고, 칭화유니는 디폴트를 선언한 상황임. 그러나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꾸준히 상승하는 중이며 현재 2010년대 10%, 현재는 15%

수준으로 평가됨. 미국의 제재가 강화될 수록 중국이 기술독립을 위한 드라이브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

- ◆ 미국의 동맹국들 또한 중국 압박에 동참했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는 참여국 중 한 국가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자동적으로 USMCA를 무효화하고, 이 국가를 제외한 양자협정으로 전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음. 미국 상무부가 2017년 10월 중국을 비시장경제(non-market economy)로 규정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조치였음.

- ◆ 일본과 EU 또한 법인세 인하와 이전비용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서 중국의 생산기지를 자국으로 이전하거나, 동남아 같은 제3국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음. 호주와 영국은 5G 통신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하기로 결정했고, 일부 유럽 국가들도 동참했음. 인도는 화웨이 장비와 중국 앱은 물론, 중국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 소셜미디어 웨이보, 그리고 샤오미의 브라우저까지 사용을 금지했음.

- ◆ 중국은 무역적자 감축 목표 액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협적인 태도를 유지했지만 중국제조2025에 대한 비판과 경제구조 개혁 요구는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일축했음. 또 장기적 차원에서 첨단산업 역량과 기술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내수 중심 발전으로 전환해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더 강조하기 시작했음. 2020년 7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수출 중심 발전전략인 ‘국제대순환’에서 내수 중심의 ‘국내대순환’으로의 전환, 그리고 후자를 중심으로 양자의 선순환을 만들어 내겠다는 ‘쌍순환’ 전략을 제시했음.

**중국은 첨단산업 역량과
기술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내수 중심 발전으로 전환해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더 강조하기
시작했음.**

- ◆ 중국의 이러한 장기적 발전전략은 무역·기술은 물론 통화·금융 영역에서의 전략적 경쟁과도 연관돼 있음. 독자적인 발전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달러와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 따라서 무역·기술 전쟁은 통화·금융 전쟁을 수반할 수밖에 없음.

- ◆ 중국은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해 기축통화 달러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전개하기 시작했음. 그 결과 위안화는 2016년에 무역 용자액에서 세계 2위, 국제 결제액에서 세계 4위를 차지하는 주요 통화로 부상했음. 또 2016년부터는 IMF의 특별인출권 통화 바스켓에 포함되기 시작했음. 중국은 2016년 IMF 쿼터에서 미국과 일본에 이어 3위 국가가 됐음.

- ◆ 또 중국은 국제 통화·금융 질서 다극화도 전략적으로 추진했음. 치앙마 이이니셔티브다자화(CMIM) 등 역내 통화·금융 협력을 주도했고, 통화 스왑 협정도 확대했음. 또 2014년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도 신개발은행(NDB)과 위기대응기금(CRA)을 창설했음. 일대일로 전략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도 중요한 성과였음.
※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5-16년 이후 위안화 국제화는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평가됨. 반면, 막대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으로의 도피(flight to quality)’ 속에서 2010년대에 달러화의 위상은 오히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무역·기술 전쟁은
통화·금융 전쟁으로 확대
됐음. 미국은 중국 기업을
미국의 금융시스템에서
배제하려는 제재 조치를
가동했음.**

- ◆ 무역전쟁의 와중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고, 무역·기술 전쟁은 통화·금융 전쟁으로 확대됐음. 미국은 금융거래 금지와 자산매각 조치 등 중국 기업을 미국의 금융시스템에서 배제하려는 제재 조치를 가동했음. 또 홍콩보안법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 정부 및 기업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고 중국을 압박했음. 상원에서는 양당의 합의하에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기업은 상장 폐지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음.
- ◆ 미중 상호의존성에 내재된 적대와 모순은 미국 국채 상황을 둘러싼 논란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음. 통화·금융 전쟁이 첨예화되면서 미국은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의 디폴트 가능성을 언급했음. 중국은 국채 상환 거부는 곧 달러 패권 붕괴를 의미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미국 국채를 점진적으로 매각하고 외환 구성을 다원화하겠다고 밝혔음(Pearl and Yeung, 2020).
- ◆ 물론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상호의존적 공생이 ‘금융공포의 균형(Balance of Financial Terror)’으로 전환될 수 있음이 드러났음. 이런 점에서 통화·금융에서 심화되고 있는 미중 경쟁 또한 단순한 환율조정이나 투자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패권경쟁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무역·기술, 통화·금융
영역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양국의 대립은 군사·안보,
가치, 체제의 정당성을
둘러싼 전면전의 양상으로
악화됐음.**

- ◆ 무역·기술, 통화·금융 영역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양국의 대립은 군사·안보, 가치, 체제의 정당성을 둘러싼 전면전의 양상으로 악화됐음. 미국은 중국을 독재정권으로 규정했고, 미국적 가치에 도전하는 중국을 강력히 응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the White House, 2020). 또 ‘타이베이법’, ‘홍콩인권법’, ‘위구르인권법’을 제정해 중국을 압박했고, 이에 따라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갈등도 직접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음. 미국과 중국이 첨단전략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무력시위에 나서면서 남중국해와 타이완해협에서 군사적 긴장도 고조됐음. 미국은 쿼드, 파이프 아이즈(Five Eyes) 국가들과 반중연대를 강화했고, 반중 경제블

록인 경제변영네트워크(EPN)에 동맹국들의 참여를 요구했음.

※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통해 일국양제를 무력화하려 하자 미국은 2019년 11월 ‘홍콩인권법’을 제정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조치를 시작했음. 2020년 3월에는 타이완과의 경제관계를 강화하고 타이완의 국제관계 강화를 지원할 것을 규정한 ‘타이베이법’이 제정됐고, 6월에는 ‘위구르 인권법’을 제정, 신장 자치구 관료들에게 제재를 가했음.

- ◆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대중 강경정책에 대한 강력한 합의가 형성됐다는 점이었음. 트럼프 행정부 집권 초기 바이든과 민주당은 트럼프의 대중 강경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음. 그러나 중국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미중관계가 악화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중국의 위협을 과소평가했다는 반성이 확산됐음. 대외정책 역량을 동아시아에 집중하고 중국을 강하게 압박한 트럼프의 대외전략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도 등장했음(Gramer, 2020; Campbell and Doshi, 2020). 양당의 합의 속에 제정된 중국 제재 법안들, 그리고 대선 캠페인에서의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 경쟁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합의를 명확히 드러냈음.

IV.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미중관계

- ◆ 바이든은 집권 직후부터 중국에 대해 적대적이고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음. 바이든은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패권 도전국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힘을 통해 이를 억제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음. 바이든 시대 미중 패권경쟁에 대한 대응전략은 상원에서 통과된 ‘미국혁신경쟁법(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에 집약돼 나타났음. 여기에서 미국은 경제, 군사·안보, 가치, 기술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계획을 총체적으로 재정비했음.
- ※ 2021년 6월 상원에서 통과되어 하원에서 검토절차를 거치고 있는 ‘미국혁신경쟁법’은 7개의 세부법안으로 구성됨. ‘무한 프론티어법(Endless Frontier Act)’과 ‘반도체 및 통신법(Chips and USA Telecom Act)’은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배터리 등 핵심분야의 연구·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들을 포함. ‘전략 경쟁법(Strategic Competition Act)’과 ‘중국 도전 대응법(Meeting the China Challenge Act)’은 중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 불공정 무역 등을 직접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법안. ‘무역법(Trade Act of 2021)’ 및 ‘미국 미래 수호법(Securing America’s Future Act)’은

*바이든은 집권 직후부터
중국에 대해 적대적이고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음.*

*미중 패권경쟁에 대한
대응전략은 ‘미국혁신
경쟁법(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에
집약돼 나타났음.*

무역전쟁의 연장선에서 대중국 관세정책, 그리고 ‘Buy American’ 같은 제조업 기반 강화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 하원 또한 유사한 내용을 담은 ‘미국 리더십 및 관여 보장법(Ensuring American Global Leadership and Engagement Act)’을 논의 중임.

- ◆ 바이든은 취임 직후 연방정부의 미국산 제품 구입을 의무화하고, 국내생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음. ‘미국혁신경쟁법’ 또한 인프라 건설과 공공부문 투자에서 ‘Buy American’ 규정을 확대·강화했음.

※ 트럼프와 바이든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Buy American’ 조항은 오바마 행정부의 ‘미국재건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으로 소급함. 이는 당시에도 WTO의 정부조달협정 관련 규정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음. 다자주의를 훼손하는 자국 우선주의가 트럼프만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는 대목임.

- ◆ 중국 자본에 대한 감시, 그리고 중국의 통신장비,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제재도 더 확대됐음. 제재의 근거는 국가안보 위협이었음. 타이(K. Tai)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필요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수퍼 301조’ 등 여러 보복조치들이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음.

- ◆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군사적 도전도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강조했음. 2021년 ‘국방수권법’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력 증강을 규정한 ‘태평양 억지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이 신설됐음. ‘미국혁신경쟁법’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협력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됐고, 쿼드 차원에서 중국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됐음. 다영역작전(MDO) 개념이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 개념으로 발전되는 등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 대한 대응 또한 강화됐음. 아프간 철군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 병력과 장비를 증강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제시됐음(U.S. Department of Defense, 2021; Hoehn, 2021).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가치에 기반한 동맹관계 회복이었음.

-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자유주의적 패권 전략, 그리고 미국 주도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복원하려는 시도였음. 그 핵심은 트럼프식 일방주의의 폐기와 가치에 기반한 동맹관계 회복이었음(the White House, 2021a).

- ◆ 미국은 중국과의 대결을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충돌로 규정, 인권·민주주의 같은 가치를 통해 반중동맹을 정당화했음. ‘미국혁신경쟁법’은 타이완과의 군사협력 강화와 무역협상 재개를 제안했고, 홍콩 민주

화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음. 또 위구르족 탄압을 제노사이드로 규정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구르 인권법’을 개정할 것을 명시했음. 이에 따라 대중 강경정책은 미국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들의 공동과업이 됐음. ‘민주주의 정상회의(Global Summit for Democracy)’나 ‘민주주의 10개국(D10)’ 구상이 바로 이런 인식의 산물이었음.

※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커트 캠벨(K. Campbell)은 중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군사·안보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음. 그에 따르면 D10은 경제, 쿼드는 군사·안보에서 반중 전선의 핵심축이었음.

- ◆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한 대중정책의 또 다른 중심축은 강력한 산업정책을 통해 첨단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겠다는 구상이었음. 바이든 대통령은 2월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점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음. 그 결과 발표된 보고서는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구축, 국가적 차원의 연구·개발 지원을 제안했음(the White House, 2021b).

대중정책의 또 다른 중심축은 강력한 산업정책을 통해 첨단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겠다는 구상이었음.

- ◆ 이런 맥락에서 ‘미국혁신경쟁법’은 2025년까지 국립과학재단(NSF)을 중심으로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로봇, 배터리 등 첨단분야의 연구·개발에 2,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했음. 2021년 ‘국방수권법’에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들이 대거 포함됐음.

- ◆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가치동맹이 기술·생산동맹으로 진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임. 미국은 중국을 배제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동맹관계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음. ‘미국혁신경쟁법’에는 핵심기술에서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해 기술통제 및 국제표준 제정에서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됐음.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더 직접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조치도 시행됐음. 2021년에만 세 차례 개최된 ‘반도체 공급망 복원에 관한 CEO회의’가 바로 그 사례임.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국가는 일본, 타이완, 한국 같은 동아시아의 동맹국이었음.

주목해야 할 것은 가치동맹이 기술·생산동맹으로 진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임.

※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와 인텔은 미국에 파운드리 공장을 추가로 짓기로 했고, SK하이닉스는 실리콘밸리에 연구·개발 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음. 삼성전자 또한 오스틴 공장에 이어 추가적인 투자 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있음.

- ◆ 가치동맹이 기술·생산동맹으로 확대되면서 신냉전적 대립구도는 더 강화됐음. 미국은 G7을 축으로 대서양 동맹을 재건하고, 이를 반중동맹

가치동맹이 기술·생산동맹으로 확대되면서 신냉전적 대립구도는 더 강화됐음.

의 틀과 결합하려 했음. 2021년 6월 G7 정상회의 참가국들은 미국의 대중 강경정책을 수용,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홍콩의 자치, 신장의 인권과 자유, 남중국해의 현상유지와 안정을 요구하며 중국을 강하게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음. 또 일대일로를 대체할 새로운 인프라 투자 지원 프로젝트로 기후·환경, 노동,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B3W(Build Back Better World)를 제안했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이 구조적 도전세력이라는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반중 전선의 동반자로 끌어내는 데 성공했고, 영국, 호주와 3자 군사동맹 오키스(AUKUS)를 체결했음.

중국 또한 미중

상호의존성의 틀에서 이탈하려는 시도를 가속화했음.

일대일로 전략의 초점을

전통적 인프라 건설에서

디지털인프라 건설로 전환해

기술굴기와 결합했음.

- ◆ 미국의 압력이 거세지면서 중국 또한 미중 상호의존성의 틀에서 이탈하려는 시도를 가속화했음. 미국의 제재로 인해 다수 반도체 기업들이 도산하는 등 타격을 받았지만,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임.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려하자 기술적 독립성의 확보를 더 강조하기 시작했음. 또 일대일로 전략의 초점을 전통적 인프라 건설에서 디지털 인프라 건설로 전환해 기술굴기와 결합했음. 2020년 19기 5중 전회와 14차 5개년 계획에서 중국이 가장 강조한 것은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산업과 과학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기술혁신이었음. 2021년 중국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의 핵심 화두 또한 ‘기술의 자립·자강’이었음.

V. 세계 질서의 진로와 한국의 대응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패권경쟁의 전개는 미중 상호의존성의 종언, 즉 탈동조화(decoupling)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드러냈음.

-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패권경쟁의 전개는 미중 상호의존성의 종언, 즉 탈동조화(decoupling)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드러냈음. 물론, 양국의 상호의존성,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비용 때문에 급속한 탈동조화는 불가능하다는 비판도 있음(Farrell and Newman, 2020). 또 미국 내에서도 양국 사이의 적대와 갈등을 인정하고, 그것이 파국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음(Campbell and Sullivan, 2019; Nye, 2018; 2021).
- ◆ 그러나 2007-08년 금융위기와 그 이후의 갈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양국의 상호의존적 관계 자체가 적대와 모순을 내재하고 있음. 따라서 급속한 탈동조화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 차원에서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 트럼프 시대를 거치면서 미국의 수정주의적 지향은 더 급진화됐으며, 이런 경향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음. 게다가 미국은 현상을 변경하고 자국 중심의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구조적 힘에서도 여전히 우위를 유지하고 있음(Beckley, 2018; 2020).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으며, 동시에 경제회복을 위한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미국은 현상을 변경하고
자국 중심의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구조적 힘에서도
여전히 우위를 유지하고 있음.*

- ◆ 중국의 경우 현상타파에 대한 유인이 미국만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미국이 구축한 질서에 편승해서 발전을 지속해 왔으며, 또 자국 중심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임. 그러나 양적 측면에서 양국의 경제적 격차가 지속적으로 좁혀지면서 중국이 미국의 확고한 경쟁자로 자리 잡은 것은 분명해 보임. 또 미국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독자적인 세력권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확대하기 시작했음.

- ◆ 최근 중국은 반중동맹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훈련과 작전을 대폭 확대했음. 또 G7과 NATO를 비판하면서 타이완, 신장, 홍콩, 남중국해 등 소위 핵심이익은 중국의 주권이 달린 문제이며, 양보 불가능한 레드라인이라며 매우 강경한 태도를 표명했음. 자신이 주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포괄적범태평양파트너십(CPTPP)에도 가입신청을 하는 등 지역질서 재편을 위한 주도권 경쟁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

- ◆ 중국이 기술, 인프라, 군사 부문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화웨이는 러시아의 5G 네트워크 건설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종 인프라 건설에도 중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중임. 또 양국은 남중국해, 중국 서부 내륙, 서해, 동해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음.

- ◆ 특히 미국의 공세에 대항하는 중국의 이런 시도들이 소위 '중국 특색'에 대한 강조와 함께 공산당, 그리고 시진핑 개인으로의 권력집중과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중국이 수정주의 지향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패권경쟁을 중·장기전의 차원에서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임.

*중국이 수정주의 지향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중·장기전의 차원
에서 대비하고 있음*

- ◆ '투키디데스 함정'이나 '킨들버거 함정' 같은 재앙적 사례들이 미중 패권경쟁을 설명하기 위해 종종 동원되곤 함. 그러나 미중 양국의 힘과 의도를 고려했을 때 두 경우 모두 미중관계를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또 두 개념 모두 도전국의 능력과 의도를 중심으로 한 결정론의 편향을

떠고 있으며, 패권전쟁과 패권이행이라는 결론을 전제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파국을 분석하려 했다는 한계가 있음.

- ◆ 또 하나 검토해 볼 수 있는 사례는 1980년대의 미국패권 변화 과정임. 당시의 상황은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상황과 유사한 점이 많음. 또 당시 미국이 일본에 요구했던 조치들은 금융위기 이후 중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과 동일함. 트럼프와 바이든의 중국 때리기 양상 또한 레이건 행정부의 일본 때리기와 유사함.
- ◆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미국의 공세에 대응할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일본과 같은 경로를 선택하지 않으리라는 점은 분명해 보임. 따라서 미국 패권의 궤도 또한 1980년대 패권 쇠퇴의 과정과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큼.
- ◆ 미국의 능력 또한 중요한 문제임. 우선, 군사력을 제외한다면 미국 단독으로 중국을 압도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음. 바이든 행정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책과 공공인프라 투자를 바탕으로 경제적 역량을 회복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겠다고 공언했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기 힘든 규모의 지출규모는 기축통화 달러의 우위를 여실히 증명했음. 그러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 그리고 기술경쟁의 특성으로 인해 단기간에 미국이 원하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지는 불분명한 상황임. 미국이 가치에 기반한 동맹을 기술·생산 동맹으로 확장하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임.
- ◆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만큼이나 강경한 대중정책을 실행하면서도 동시에 ‘미국의 귀환(America is Back)’과 ‘정상으로의 복귀(Return to Normalcy)’를 외치면서 트럼프라는 이단, 트럼프즘이라는 비정상성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주장하고 있음.

미국은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당분간 국내적 자원
동원보다는 외부로부터의
추출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큼.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동맹국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오히려 세계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음.

- ◆ 그러나 자유주의적 패권으로서 미국의 위상을 복원하고, 이를 토대로 반중 연대를 구축하려는 이런 시도의 성공 또한 쉽지는 않아 보임. 트럼프즘이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패권전략에 대한 국내적 합의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미국은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당분간 국내적 자원 동원보다는 외부로부터의 추출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큼.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동맹국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오히려 세계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음.

※ 일례로 미국은 쿼드를 중국을 견제하는 공식적인 다자 안보제도로 발전시키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지만, 쿼드의 위상이나 쿼드의 확대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임. 중국 경제의 위상을 고려했을 때 반중동맹이 어느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함. 이 때문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EU나 G7 차원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중국과의 갈등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음.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의 60%를 소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타이완이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임.

※ 파이프 아이즈, 그리고 오키스로 묶인 호주와 영국이 미국과 가장 큰 교집합을 갖는 동맹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오키스를 둘러싼 논란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들과의 관계 강화는 EU, 일본 같은 다른 동맹과의 관계설정에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음.

◆ 이러한 상황은 패권국 미국의 강력한 수정주의 전략으로 인해 세계질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패권 불안정(hegemonic instability) 상황이 도래할 위험이 있음을 보여줌. 1970-80년대에도 미국의 일방주의적 대외전략으로 인해 패권 불안정이 유발된 바 있음. 현재 미국과 중국의 상대적 국력과 패권경쟁의 양상을 고려한다면, 불안정의 정도는 과거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고, 미국 패권의 진로는 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중국의 역량이나 수정주의적 의도에 따라 패권 불안정을 넘어 두 강대국의 갈등이 세계질서를 위협하는 'G-minus-2' 상황이 도래할 위험도 있음.

◆ 이런 상황은 미중 갈등의 주요 전장이며, 두 국가와 모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 중요한 전략적 도전임. 특히 한국은 미국의 핵심 군사·안보 동맹국인 동시에 중국의 팽창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접국이기도 함. 경제적 측면에서는 미중 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이 불가능한 상호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음. 신냉전 구도의 강화로 인해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받을 경우 한국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큼. 특히 가치·기술·생산 동맹에 기초해 반중 전선을 구축하고자 하는 미국의 시도는 동맹국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가능성도 있음.

◆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음. 그러나 두 강대국의 갈등을 최대한 순치시키고, 신냉전적 줄서기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전략을 기본적인 생존의 차원에서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신냉전과 패권경쟁의 시대, 지정학적 혼란의 시대에 자조(self-help, 自助)를 도모할 수 있는 국력을 확보해야 함.

*미국의 강력한 수정주의
전략으로 인해 세계질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패권 불안정(hegemonic
instability) 상황이 도래할
위험이 있음*

*중국의 역량이나 수정
주의적 의도에 따라 패권
불안정을 넘어 두 강대국의
갈등이 세계질서를 위협
하는 'G-minus-2' 상황이
도래할 위험도 있음.*

*두 강대국의 갈등을 최대한
순치시키고, 신냉전적
줄서기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전략을 기본적인 생존의
차원에서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둘째, 외교의 유연성과 실용성을 제고해야 함. 특히 미중 가운데 일방과의 관계에 본질적 가치를 부여하거나, 일방만을 선택하는 ‘상수’가 되기 보다는 스스로 유연한 ‘변수’로 자리매김해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함.
- ◆ 셋째, 이를 위해서는 한국외교를 확고한 원칙을 통해서 정당화하고, 이를 통해 미중 양국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함.
- ◆ 넷째,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중 사이에 끼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이들과 함께 미중 갈등을 완화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함.
- ◆ 미중 신냉전의 상황은 한국의 미래에 중대한 도전인 것은 분명함.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외교전략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제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간다면, 현재의 위기는 한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임.

참고문헌

- Beckley, Michael, 2018. *Unrivaled: Why America Will Remain the World's Sole Superpower*,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 2020. “Rogue Superpower: Why This Could Be an Illiberal American Century”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2020.
- Campbell, Kurt M. and Rush Doshi. 2020. “The Coronavirus Could Reshape Global Order” *Foreign Affairs* Mar 18, 2020.
- , and Jake Sullivan, 2019. “Competition Without Catastrophe: How America Can Both Challenge and Coexist With China”,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2019.
- Dooley, Michael P., David Folkerts-Landau and Peter Garber, 2003. “An Essay on the Revived Bretton Woods System” NBER Working Paper, No. 9971.
- Farrell, Henry and Abraham L. Newman. 2020. “Chained to Globalization: Why It’s Too Late to Decouple” *Foreign Affairs* Jan/Feb, 2020.
- Ferguson, Niall and Moritz Schularick, 2007. “Chimerica and Global Asset Markets” *International Finance* 13(3).
- Gramer, Robbie, 2020. “Trump’s Foreign-Policy Adventures Haven’t All Flopped” *Foreign Policy* October 14, 2020.
- Henry Farrell and Abraham L. Newman, “Chained to Globalization: Why It’s Too Late to Decouple” *Foreign Affairs* Jan/Feb, 2020.
- Hoehn, John R. “Joint All-Domain Command and Control: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46725.
- Nye Jr, J. S., 2018. “The Cooperative Rivalry of US-China Relations” *Project Syndicate* Nov 6, 2018.
- , 2021. “The Logic of US-China Competition” *Project Syndicate* May 6, 2021.
- Pearl, Harry and Karen Yeung, 2020. “US Coronavirus Stimulus Reignites China’s Criticism of Dollar Hegemony, but no Alternative Seen Any Time Soon” *South China Morning Post* July 7, 2020.
- U.S. Department of Defense, 2019. *Indo-Pacific Strategy*.
- U.S. Department of Defense, 2021. *Global Posture Review*.
- the White House, 2017.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 , 2020. *Unites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 2021a.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 , 2021b. *Building Resilient Supply Chains,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 and Fostering Broad Based Growth: 100 Day Reviews Under Executive Order 14017*.



❖ 저자 약력

■ 공민석

現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서울대학교에서 문학사,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패권, 미국 대외전략, 동아시아 지역 체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러한 연구 주제들을 자본주의 세계체계 수준의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와 결합하는 데 주된 지적 관심이 있다. 단행본 「미중갈등의 구조」(스리체어스, 2019), 논문 「미국패권 변화의 동학과 세계체계분석의 경계들: 이론적 대안 모색을 위한 시론」, 「한국과 국제정치」 37권 2호(2021) 등의 연구를 발표했다.

기획 및 감수: 정승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김애리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